

# 해방 직후 중국 광동성 광주지역 한인들의 삶과 기록

글. 조은경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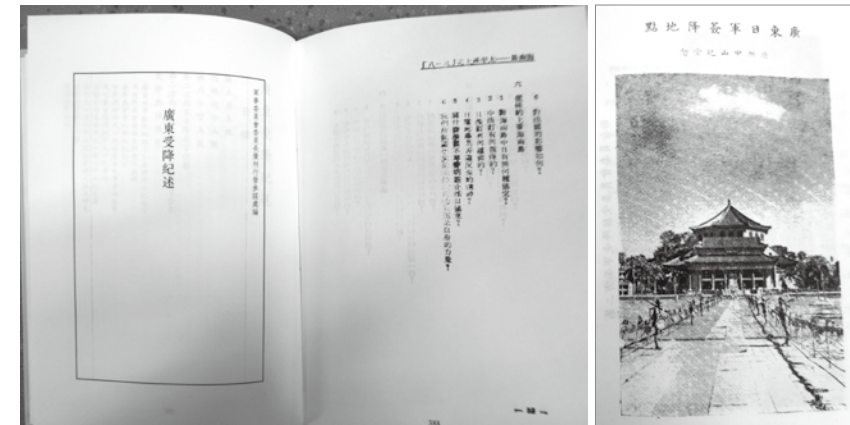
## 1. 해방 직후 광주지역 한인의 기록

남중국해 연안에 위치한 광동성(廣東省)은 인구가 1억 명으로, 그중 광주시(廣州市)는 광동성의 성회(省會)이자 중국 남부의 최대 무역도시이다. 이곳은 인천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제강점기 한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10년 8월 경술국치 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한인들은 조국독립의 꿈을 안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때 광동을 지역 기반으로 조직된 쑨원(孫文)의 호법정부(護法政府)는 1921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4년 광주에 설립된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와 중산대학(中山大學)은 한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였다. 이에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광주로 모여들어 이곳은 1920~30년대 중국 남부지역 한국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38년 10월 광주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들을 대신하여 군인·군속·‘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들이 광동성 일대에 거주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패망 직전까지 주로 일본군·교민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다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후 광주가 귀환항으로 결정되고 광주 거주 한인뿐만 아니라 해남도를 제외한 광동 각지의 한인 교민과 사병이 귀환을 위해 모여들면서 광주는 해방 후 중국 남부지역 한인의 주요 거점으로 다시 부상하였다.

광복 직후 한인 귀환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관련 자료가 발굴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관내지역의 경우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 등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연구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자료의 부족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해방 직후 전후처리 과정과 한인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있어 해방 직후의 상황과 광주지역 한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해방 직후 광동지역의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1946년 중국군사위원회 광주행영 참모처에서 발간



01\_ 『광동수항기술(廣東受降記述)』(1946).

02\_ 광동 주둔 일본군 항복서 명장소 중산기념당 : 『광동수항기술(廣東受降記述)』, 400쪽

한 『광동수항기술(廣東受降記述)』이 있다. 이는 일본군의 송환 등 전후처리를 완료한 후 책자 형태로 발간한 보고서로, 해방 후 제2방면군의 주도 아래 진행된 광동지역 전후처리 과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광주문사(廣州文史)》 제48집은 제2방면군 총사령관 장파쿠이(張發奎)를 비롯하여 전후처리를 담당했던 중국측 주요 인사들의 회고가 수록되어 광동지역 전후처리 실상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8월 대구의 평화도서주식회사에서 발간한 최덕신(崔德新)의 『인면항일전기(印麵抗日戰記)』는 광복 직후 광주지역 한인들의 상황과 귀환과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중국 신일군(新一軍) 고급 참모였던 최덕신은 광복 직후 신일군이 광주시 전후처리를 담당하게 되자 광주로 와서 한인들을 관리하고 귀환을 담당하였다. 이 책은 그가 인도·미얀마 전구에서 활동한 내용이 주로 적혀있지만, ‘추억(追憶)의 광동(廣東)’이라는 장에서 광동에서의 활동과 귀환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1946년 5월 광주에서 귀환한 최덕신이 1년 여 만에 발간했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전후처리 실상이 비교적 사실에 가깝게 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시 당안관에도 해방 직후 광주지역 한인들이 결성한 ‘광주시 한교협회’ 관련 문건자료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내용은 한교협회 결성에 대한 광주시 당국의 승인을 비롯하여 한인의 생계지원 요청 등이다. 이와 유사한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귀환 자료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광주시 당안관 자료가 광주시 정부와 한교협회의 왕복문서라면,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집에는 한교협회가 대한민국임시정부·광동성 정부·중국 외교부에 보낸 문서 등 다양한 자료가 산발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당안자료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광주일보(廣州日報)》·《월화보(粵華報)》 등 현지 신문에도 한교협회·한적사병집훈총대 결성 한인 귀환 등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광복 직후 광주지역 한인사회의 실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2. 해방 직후 광주지역 한인 단체의 결성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자 광주지역 한인 유력자들은 기존 한인과 강제징용·징병되었다가 해산된 한인을 규합하고자 9월 5일 유월조선동민회(留粵朝鮮同民會)를 결성하였다. 광주지역 전후처리를 담당할 신일군은 한인 장교인 제38사 고급 참모 최덕신에게 한인 교민과 사병의 관리책임을 맡겼다. 이에 한인 유력자와 최덕신은 1945년 10월 6일 조선동민회를 재정비하여 광주시 한교협회를 결성하였다.

한교협회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과 사병 가운데 범죄행위가 없는 자를 회원으로 하였다. 당시 광주에 거주하던 한인은 400명 내외로, 상당수가 여성이었다. 직업은 술집 작부 또는 '위안부'가 많았다. 그밖에 일본인을 상대로 여관·식당·식품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한인도 있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인이 전쟁포로로 관리되자 더 이상 일본인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고에 직면하였다. 또한 광동성 일대에 강제 징용·징병된 한인이 2,0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해방 후 이들이 광주시로 모여들자 한교협회는 자체적으로 민가를 구해 한인의 집단생활을 운영하였다.

당시 한교협회는 관리하는 한인의 수를 453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영양 부족과 위생시설 미비 등으로 환자가 속출하였다. 하지만 경비가 부족하여 생활고가 매우 심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한교협회가 운영하는 집단 거주지 3곳 중 제2집단지에서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호·관리해야 하는 한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한교협회는 광주시 정부 등 중국 당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광복 직후 중국 관내에서 한국광복군 확군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광동성 일대의 한인 사병을 한국광복군으로 확충하고자 조일문(趙一文)을 특파원으로 파견하였다. 광주에 도착한 조일문은 제2방면군 총사령관 장파쿠이를 만나 광동지역에서 한국광복군의 조직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비·가옥·피복·무기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인 사병은 한국광복군으로 편제되지 못하고 대신 1945년 12월 17일 중국군사위원회가 관할하는 한적사병집훈총대(韓籍士兵集訓總隊)로 결성되었다. 총대장은 한교협회 이사장인 최덕신이 겸임하고 집훈총대의 총인원은 1,48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적사병집훈총대는 집총 및 제식훈련·총대 보초 등 일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사연예단(韓士演藝團)이라는 이름의 연극단을 조직하고 축구단을 결성하였다. 또한 한교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다. 두 단체는 1946년 1월 9일 오전 10시 한교협회 사무실에서 신탁통치 반대 회의를 개최하고 반탁선언문과 대회 결의문을 한·중·영 3개 국어로 작성하여 각국 영사관에 전달하였다. 3월 1일에는 3·1절 기념식 겸 한적사병집훈총대 성립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2방면군 정치부 대표 등 중국인 유력 인사를 비롯하여 한인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대 검열과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웅변대회·연극·축구시합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거행되었다.

## 3. 한인의 귀환 과정과 잔류 한인의 처리

광주지역 한인들은 한교협회와 한적사병집훈총대를 결성하여 광동성에 흩어진 한인을 어느 정도 규합하고 이들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교협회는 해방 직후부터 광주시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한인의 조속한 귀환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광동지역 한인의 귀환이 확정된 것은 이 지역 일본인의 송환이 어느 정도 완료된 1946년 4월이었다.

귀환일이 확정되자 광주시 한교협회와 한적사병집훈총대는 4월 20일 송별회를 거행하고 4월 22일 황포에 집결한 후 호문(虎門)으로 이동한 뒤 미국선박에 탑승하여 출항을 기다렸다. 정확한 귀환인원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한인 총수 등을 감안할 때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1946년 광동에서 귀국한 이영숙이 "귀국선에 위안부들이 가득 탔었다."고 회고한 내용으로 보아 귀환자 가운데 '위안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환 한인의 인솔은 최덕신이 담당하였다.

배를 타기 위해 황포에 모인 한인은 명부조사·범죄여부조사·위생검사 등을 받고 선박에 탑승한 후 4월 24일 아침 광주시를 떠났다. 일행은 출항

다음날 대만 남단을 지날 때 폭격을 당해 바다에 수장된 동지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냈다. 귀환 한인은 5월 1일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상륙하지 못했다. 이들은 20일 가랑 배에서 머물다가 5월 20일 부산항에 상륙할 수 있었다.

한인 대다수가 귀환한 후 한교협회는 사실상 김종혁(金從革)은 혼자 일상 업무를 처리하며 운영되었다. 김종혁은 한교협회 부이사장으로 한교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인물로, 1946년 3월 말 최덕신의 후임으로 한교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귀환하지 않고 광주에 남아 한교협회를 재정비하였다. 1946년 10월 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남판사처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기존 한교협회가 담당해온 한인 관련 대외 업무는 화남판사처 교무조에서 처리하였다. 한교협회는 친선교류단체로 업무를 조정하여 화남판사처와 함께 운영되었다.

한인 대다수가 귀환한 후 한교협회와 화남판사처의 주요 업무는 남아있는 한인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중 하나는 한인의 추가 귀환이었다. 1946년 10월 일본인의 추가 귀환 소식이 전해지자 한교협회는 일본인 귀환선에 미귀환 한인 10명을 함께 태워 이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과 교섭하였다. 또한 이들이 육로교통을 통해 귀환할인 광주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광동성과 광주시 당국에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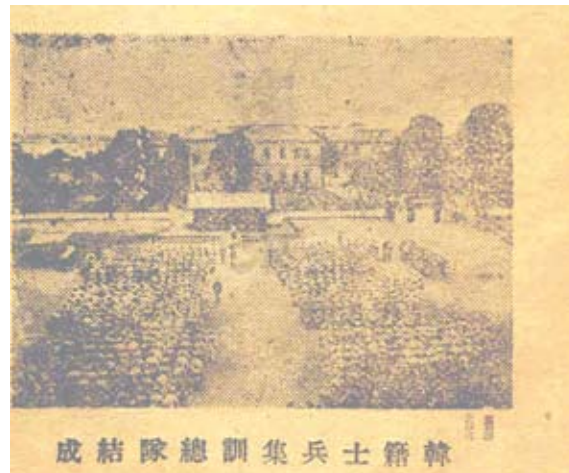
03\_ "인면항일전" (印緬抗日戰記), (1947)

현지 정착을 원하는 한인에 대해서는 서류증 발급요청을 대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교협회와 화남 판사처는 광동성 정부 또는 중산대학으로 공문을 보내 한인 학생의 입학에 요청하고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대학입학은 실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서류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인 두세 명에 대해 입학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1946년 10월에는 광주에 머물고 있던 한인 학생 20명이 중산대학에 입학하여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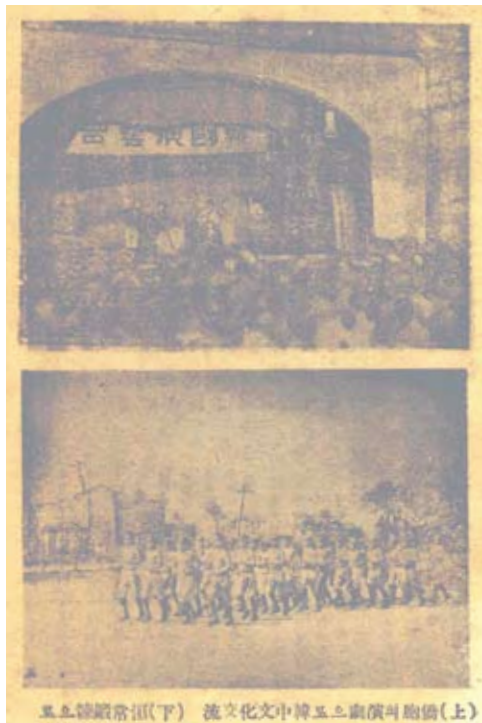
4. 기록의 추가 발굴을 기대하며

1945년 8월 해방 당시 국외에 있던 한인의 수는 500만 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10만 여 명이 중국 관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광주를 포함하여 광동지역 한인 수를 2,000명으로 추산해보면 이는 관내지역 한인 총수의 2%에 불과한 수치이다. 아무래도 인원이 적다보니 한인 관련 기록이 많지 않고,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산발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 흩어진 기록의 조각을 이어붙이는 작업은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실상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일제강점기 중국 남부지역 한인사회가 같은 시기 한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중국 만주나 관내지역 주요 대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국내와의 거리·인구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들 지역과 유사하



04\_한적사병집중총대 결성 : '인면항일전기(印緬抗日戰記)',



05\_광주 한인들의 공연장면(위)·한적사병집중총대 체력단련(아래) : '인면항일전기(印緬抗日戰記)',

06\_《印緬作戰ノ倭軍ヲ殲滅》：中央軍參謀이든崔大佐歸國, (자유신문)1946. 5. 23

면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해방 직후 상황만하더라도 화북 등지에서는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중국 국민당과 중국공산당 간의 세력 갈등이 첨예했으나 광동지역은 중국국민당의 주도 아래 전후처리가 빨리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한인의 대처 또한 상대적으로 빨랐다. 귀환에 대한 입장도 관내지역에서 이미 생활 기반을 형성한 한인들은 귀환통보에 반발했으나 광주지역 한인들은 오히려 귀환을 기다렸다. 또한 광동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가까워 한인의 10배에 달하는 대만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 한인에 대한 처리는 대만인보다 뒤로 밀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일제강점기 중국 남부지역 한인사회의 실상을 밝히고 이곳을 기반으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을 추적하는 작업은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다양한 실상을 규명하는데 의미가 있다. 해방 직후 광동성 광주지역 한인사회의 실상과 귀환과정을 밝히는 과정은 그 첫 번째 시도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중국 남부지역 한인 귀환의 실태,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중국 남부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등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필자 소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중국 남부지역 한인 사회와 이곳을 무대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로 공부하고 있다. 한중연대 등 일제강점기 동아시아 공동항일투쟁에 관심이 있고 근현대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기념관·전시관의 전시 내러티브 비교연구도 진행하고 있다.